



10.30(화) 16:30 (관계부처 브리핑 시작) 이후 사용

담 당	국무조정실 재정기후정책팀	팀장 이현우, 사무관 김수정 (044-200-2185, 2188)
	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	과장 김시동, 사무관 김영은 (044-215-5490, 5491)
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과장 천범산, 서기관 구분억 (044-203-6199, 6528)
	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	과장 김성기, 사무관 나기홍 (02-2100-3503, 3505)

정부, 재정분권 본격화 한다

- 지역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-

▶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본원칙

- ① (지방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) 중앙의 기능·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'22년까지 7:3으로 개선
- ② (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)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
- ③ (단계적 추진)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

▶ 1단계 재정분권 추진('19~'20년)

- (지방세 확충) 지방소비세 도입('10년) 이후 최대폭(10%p)으로 지방세 확충
- (기능이양) 기능이양('20년 3.5조원 내외)으로 지방의 자율성·책임성과 권한 확대
- (소방직 국가직화 지원)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자원 확보
- (재정격차 완화)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,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

▶ 2단계 재정분권 추진('21~'22년)

-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,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

▶ 기대효과

- ① 국세:지방세 비율 7:3 달성 ② 지방의 권한·기능·자원 대폭 강화
→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

□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,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.30일 「재정분권 추진방안」을 확정·발표했습니다.

□ 중앙과 지방간,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.

* 중앙·지방 재원비율('16년): 세입 76:24 / 세출 34:66, 재정자립도('16년): 55.8%
재정자립도 30% 미만 자치단체: 수도권 19개/69개(28%) vs 비수도권 126개/174개(72%)

□ 이에, 정부는 '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'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:3으로 개선하는 한편,

○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을 진행해왔습니다.

- 지난해 11월부터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, 전문가,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,

- 올해 9월에는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□ 오늘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.

□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첫째,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'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: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.

- 둘째,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
- 셋째,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'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.

□ '19~'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우선,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,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%에서 '19년 15%, '20년 21%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.
 -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, 지방소비세 도입('10년)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'19~'20년간 11.7조원 이상('19년 3.3조원, '20년 8.4조원)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② '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.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합니다.
 -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하여 원활한 기능이양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③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,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%에서 '19년 35%, '20년 45%로 인상합니다.
 - 이를 통해 '19~'20년간 8천억원 규모('19년 3천억원, '20년 5천억원)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게 됩니다.

- '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, 근무 형태,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④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*을 적용하고, '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.

* '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소비지수×지역별 가중치(수도권:광역시:도=1:2:3)를 적용

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습니다.

- 다만,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할 예정입니다.

□ '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먼저,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: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,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합니다.

○ 이를 위해 중점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첫째,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-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 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, 지방소득세,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합니다.

- 둘째,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,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원배분,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합니다.

- 앞으로, 관계부처, 지자체, 시도교육청,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'19년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
 -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,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.
 -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, 지자체, 시·도교육청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, '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.4조원이 이전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,
 -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'22년에는,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★ (참고)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

구분	1단계				2단계	합계
	'19년	'20년	소계('19~'20년)		'21~'22년	
			순증	누적		
지방세 확충	3.3조원 * 지방소비세율 +4%p	5.1조원 * 지방소비세율 +6%p	8.4조원	11.7조원	12조원+a * 국세지방세 전환 포함	20.4조원+a
소방직 지원	0.3조원 * 소방안전교부세율 +15%p	0.2조원 * 소방안전교부세율 +10%p	0.5조원	0.8조원		
기능이양	-	-3.5조원 내외	-3.5조원 내외		-	-
지방재정 순확충**	2.9조원	0.8조원	3.7조원	6.6조원	-	-
국세:지방세 (16년 76:24)	75:25	74:26	74:26		70:30	70:30

*'19년: '19년 예산안, '20년: '18 -'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

** 지방세 확충(+), 소방직 지원(+), 기능이양(-), 교부세 감소분(-) 등 감안

- 정부는 금일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-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“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, 책임,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,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”인 만큼,
 -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

※ <별첨> 재정분권 추진방안